주차공간 선점 노상 적치 '꼴불견'

서귀포시 해마다 불법 적치행위 1000건 이상 단속
과태료 부과보단 계도… 시민의식 개선 목소리 비등

12일 서귀포시 주택가 이면도로에 놓여있는 불법 적치물들. 이태윤기자

주택가는 물론 상가 앞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적치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은 매년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계도와 홍보 위주의 단속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찾은 서귀포시청 인근 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는 의자, 폐타이어, 화분, 물통 등의 적치물이 놓여 있었고 이들 적치물 대부분에는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안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해당 스티커가 부착된 적치물은 이미 한번 단속이 이뤄진 것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행정의 단속을 비웃듯 스티커가 부착된 적치물들을 다시 재사용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서귀포시 상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도 불법 적치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서귀포시청 인근 주택가에서 만난 운전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적치물이 놓여 있는데 자기 편의를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옳지 않다"며 "또 불법 적치물을 보니 대부분 이미 단속이 이뤄진 것들인데 아무렇지 않게 재사용되고 있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속 이후 자진 철거 했다가 다시 길가에 적치물을 쌓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단속 효과는 거의없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적치물 단속 건수는 2017년 1150건(과태료 0건), 2018년 1350건(과태료 1건), 올해 11월 현재 1000건(과태료 0건) 등 매년 1000여건의 불법 적치물 행위가 단속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적치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될수 있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은 자기중심적 욕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법 행위를 자제하는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서귀포시 내년 7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서귀포시는 과속이나 도로 기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내년에 3억원을 들여 7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 12~13일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내년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할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과거 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읍면동별로 ▷과속이나 신호 관련으로 사망과·중상 사고율이 높은 지점(구간) ▷신호 위반에 따른 차량 단독사고율이 높은 곳 ▷도로 기형구조로 사고 위험률이 높은 곳을 확인해 장비 설치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산록도로 지점 2개소에 구간단속카메라, 중문고등학교 앞 지점 등 3개소에 고정식카메라 등 5개소에 단속장비를 설치 운영중이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총 91개소에 시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성산고, 국립해사고 전환 다시 수면위

국회 농해수위 예산 반영
기재부 등 정부부처 반대
예결위 통과 여부 불투명

성산고등학교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록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로 이미 수차례 무산된 바 있어 불씨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은 제주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에 국립 해사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립 해사고 설치령(대통령령)' 개정을 지속 요구한 끝에 2015년과 2018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국 실업계 고교의 국립고 전환 요구,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올해 초부터 사실상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을 재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은 멈춰있지만 최근 국회 상임위의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한 예산 57억 3900만원을 새롭게 마련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크루즈 기항지인 제주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 전문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성산고 총동문회 등이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면서 해당 상임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태곤 성산고 총동문회장은 "해양수산업의 경우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해양계 학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면서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관련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를 면담해 예산 반영 배경과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에서 다음 주 중에 열리는 국회 예결소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수능 문제지 제주 도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도착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교육청 직원들이 별도의 보관 장소로 옮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자치경찰단 특별교통관리
수험생 대상 긴급 수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86명, 모범운전자회 437명(동부지회 300명, 서부지회 60명, 서귀포지회 77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2명을 도내 14개 시험장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혼잡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제주시 7개소(광양4가, 노형5가, 신제주R 등), 서귀포시 7개소(1호광장, 동문R 등)를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수험생 편의 제공에 나선다.

이와함께 자치경찰단은 출근길 운전자들은 가급적 시험장 주변 도로를 우회해줄 것과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 공사 및 자동차 경적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서귀포지역 노인층 교통사고 위험수위

최근 5년 사망자 연령대 분석
65세 이상 75명… 전체의 42%
가로등 확대 등 대책마련 절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사고발생이 가장 높은 시간은 오후 6~8시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사망사고의 경우 도심지가 아닌 외곽 일주도로 등에서 많이 발생, 사고다발 시간·장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가로등 확충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와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는 11일 오후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와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어 안전문화운동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현재까지 23명이 사망했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65세 이상이 75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51~60세 30명, 41~50세 22명, 21~30세 16명, 61~64세 15명 순이었다.

고령자 사망사고 상당수는 일주도로 등 외곽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로등 확대 설치와 과속저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간대별 사고발생은 오후 6~8시 27명, 오전 6~8시 25명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사고다발 시간과 장소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지역경찰 순찰차와 교통순찰자, 이동식 과속카메라의 연계 배치를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확대 설치 필요성 의견도 제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7월 제주경찰청의 성인 관광객 대상 조사 결과 불안요인 개선대책으로 가로등 설치 필요가 43.4%를 차지했고, CCTV 등 방범시설물 설치가 늘수록 절도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며 CCTV와 가로등 설치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 서귀포소방서는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문미숙기자